

2010년 고용 전망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살펴본 최근의 경기저점은 2009년 3월이다. 경제성장률도 2009년 1/4분기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Delta 4.2\%$)한 이후 3/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4/4분기에는 6.0% 증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09년 1월 12만 8,0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6만 7,000명으로 감소하여 2008년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를 볼 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이루어진 기업의 '급격한' 고용조정도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일단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경제도 2009년 6~8월을 저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다. 각국 정부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과는 격세지감이 있을 만큼 상향조정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의 세계경제가 V자형의 회복추이를 보이리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가부도 상황에 처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이들 두 국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에 전염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 세계 정부의 동시적 경기부양은 세계경제의 침몰을 막는 데 기여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를 그 유산으로 남기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버블형성기에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던 국가들은 현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 지난 해 경이로운 회복을 보였던 나라들도 재정균형을 도모해 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점에서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만큼

올해의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다시 요동치게 만들더라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시장은 작년에 필적할 만큼 어려울 수 있다. 신기술이나 융합산업의 영역이 아니라면 수출시장의 비중이 큰 한국경제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경제 여건이 2010년의 투자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고용사정은 1998년의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량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고용회복 속도가 빨랐다. 여기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의 기여가 컸다. 이는 역으로 2009년도 경제 및 노동시장 성과가 올해의 성과를 제약하리라고 예상케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9조 원에 달하는 추경편성을 통해 각종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재정에 의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2009년 연평균 수혜자수는 51만 9,000명에 달했다. 직접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008년 대비 28만 4,000명이 추가적으로 고용기회를 얻고 고용유지 혜택을 입은 수혜자도 8만 명 증가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경기 악화로 인한 고용감소를 완충시키고 특히 6월 이후 임시직 고용지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0년 상반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만큼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재정에 의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그 규모는 줄어들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더라도 정부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2010년의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증가는 제약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시에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감축했으므로 회복 과정에서 채용보다는 근로시간 증가의 형태로 먼저 반응할 것이다. 이 또한 고용탄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난 해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행보와 정부 일자리대책의 유산 또한 2010년의 고용성과를 일정 부분 제약할 요소이다. 2009년 일자리 나누기는 9만 명의 고용유지 효과와 적어도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불경기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감소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 항구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기에는 고용탄력성을 줄어둘게 한다.

2009년 11월 OECD와 IMF는 세계경제가 2010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2011년 이후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KDI는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국내경제가 2010년에 연간 5.5%의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물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그 증가폭은 정부의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연간 20만 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대에 1% 성장률당 취업자수 증가가 평균 6만 9,000명 수준이었던 반면, 5.5% 성장률에 20만 명의 취업자수 증가를 예상하는 것은 단위 성장률당 고용증가가 4만 명 미만에 그칠 것임을 예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적인 측면 외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경제의 일자리창출력이 2003년 이후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용위기가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박탈하여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중장년층 가구주 실직이 늘어나고, 고용위기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귀착되어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압박으로 경제운동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성장→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KL**